

고사작전에 휘말리는 한국 반도체 산업

국제 규범상 보조금이라고 하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개입이 있어야 하고, 기업에 대해 재정적 기여가 있어야 하며, 특정 기업에만 혜택이 주어지는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미국측은 한국 정부의 개입에 따라 하이닉스에 자금지원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 기 윤
(매일경제신문사
경제학박사)

미국 상무부가 4월초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해 57.37%의 고율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판정함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상계관세 부과 예비판정을 내렸다. 하이닉스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반도체를 값싸게 생산·수출함으로써 자국 반도체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최종판정이 내려지기까지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하이닉스는 대미 D램 수출에 대해 월 2300만달러(290억원) 가량의 예치금을 무는 등 이미 재정부담과 수출피해를 입고 있다.

설상가상인 것은 최근 난야테크놀로지(세계 5위 D램 생산업체) 등 대만의 4개 D램업체가 공동으로 자국 정부에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요청하기로 했다는 사실이다. 하이닉스의 공급물량을 줄여 가격 상승을 유도하고 수익성을 개선시켜 보자는 목적에서이다. 대만 언론은 아울러 일피다(NEC와 히타치 통합법인, 세계 6위 생산업체)도 대만업체의 공동대응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치 하이닉스, 나아가 한국 반도체 산업이 경쟁국의 고사작전에 휘말리고 있는 형국이다.

한국은 D램생산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 일본 유럽 대만 등 경쟁국들의 끊임없는 견제대상이 돼 왔다. 우선 세계 3, 4위를 다투는 하이닉스를 보조금 시비로 무력화시킨 다음 삼성전자 등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보려는 국제적 의도도 깔려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물론 이는 단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국제적 견제에 의해 한국 반도체 업계가 타격을 입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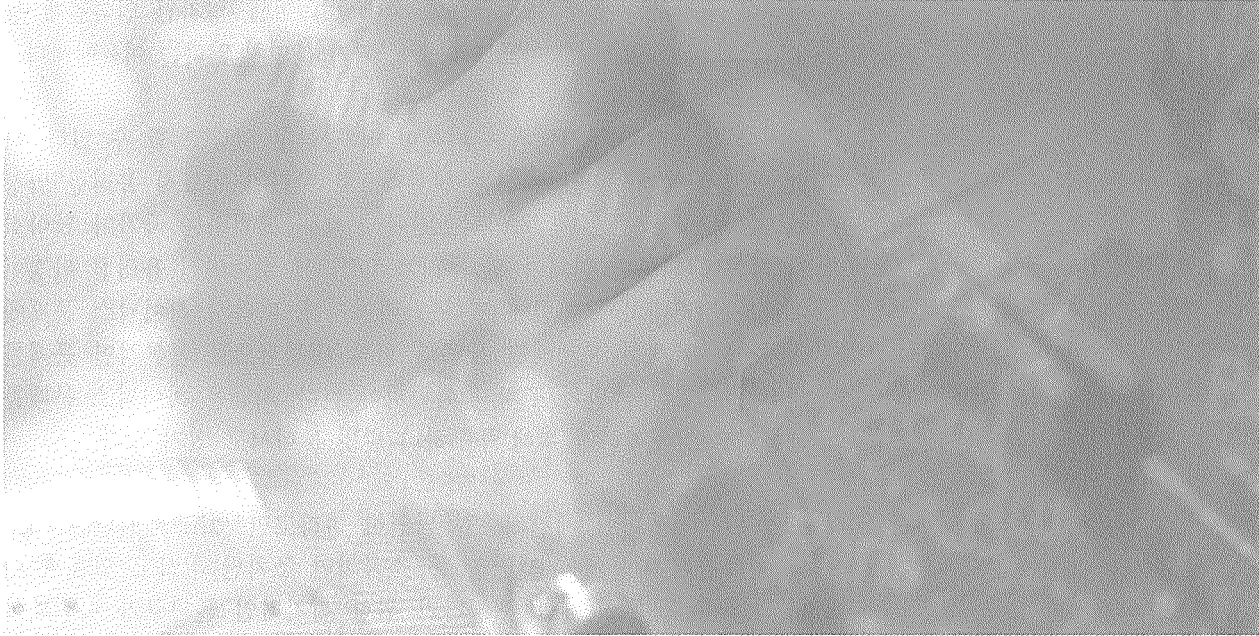
문제는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에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1차적으로는 관계국에 우리의 정당한 입장을 적극 피력해야 한다. 말하자면 하이닉스에 대한 자금지원이 보조금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알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국제 규범상 보조금이라고 하면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개입이 있어야 하고, 기업에 대해 재정적 기여가 있어야 하며, 특정 기업에만 혜택이 주어지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미국측은 한국 정부의 개입에 따라 하이닉스에 자금지원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디케이트론이나 출자전환, 채무 만기연장 및 면제, 회사채 신속인수 등 일련의 조치는 은행의 상업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자율적 조치이며, 정부가 직접 개입한 것은 아니다.

은행의 조치가 하이닉스에 재정적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금지원이 하이닉스에 대해서만 특별히 이뤄진 것은 아니다. 외환 위기 후 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시행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법정관리, 화의 등의 제도적 틀 안에서 불특정 다수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이 이뤄진 것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조치도 투자활성화를 위해 한국의 모든 기업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취해진 것이다. 정부는 이런 점 등을 강조하면서 관계국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이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 각국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절차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 특히 이 경우 상대국도 자국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²

예컨대 미국 정부는 9·11테러 직후 자국 항공업계에 대해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서비스업 뿐 아니라 제조업에 대한 보조금도 지급되어 오고 있다.

정부는 채권단이 해결 해주길 막연히 바라고만 있고 채권단은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부채연장 등 소극적인 조치만 취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돼야 할 때이다.



미국 정부는 81년에 '연구시험 조세혜택'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산업 전반에 걸쳐 연구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한 민간기업 투자비용에 대해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의 20%에 대해 기업이 세금혜택을 주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 2004년 6월 말로 만료되는 이 제도를 항구화하려는 부시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미 반도체산업협회(SIA) 등은 환영의 뜻을 표명하고 있다.

로버트 버드 민주당 상원의원 주도로 2000년 10월 성립한 '덤핑·보조금 상쇄법', 일명 '버드수정법'은 WTO협정에 허용 불가로 돼 있는 대응조치를 도입함으로써 WTO규정 위배판정을 받았다. 이 법은 특히 덤핑과 보조금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자국 생산자(제조업체)에게 반덤핑과 상계관세 수입을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조금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또 99년 3월 버드 의원이 제안한 '긴급철강대출보증법'은 향후 2년 동안 10억달러 기금을 철강업계에 저리로 대출(한도액 2억5000만달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난 3월말 미국은 WTO분쟁처리소위원회로부터 부시 정부 출범 직후 취한 철강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해 협정위반이라는 중간판정을 받았다.

미국이 주장하는 철강수입 급증과 국내산업 피해, 양자간 인과관계 등 수입제한 발동 요건 중 어느 하나도 근거가 분명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불공정한 무역행위는 미국이 더 일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반도체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하이닉스건에 문제를 제기하는 국가가 많아졌기 때문에 외톨이 신세가 된 우리가 WTO에 호소해서 유리한 판정이 내려지길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하이닉스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 분쟁해결 노력과 함께 내부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지금은 하이닉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누구하나 발벗고 나서고 있지 않다.

정부는 채권단이 해결해주길 막연히 바라고만 있고 채권단은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부채연장 등 소극적인 조치만 취하고 있을 뿐이다. 지금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돼야 할 때이다.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팔장만 끼고 있다면 국내외적으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뿐이다. 매각이나 독자생존이나 법정관리나, 아니면 청산이나 하는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분명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